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변화방향과 과제

- ◆ 중국경제는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성장의 구조 및 동력 등이 변화하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新常态)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
 -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연평균 9.7% 고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중고속성장(6~7%)으로 성장 속도가 변화
 - 투자·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초래한 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혁신이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영기업의 역할 확대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성장동력이 변화
 - 고속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환경오염, 자원사용량 급증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공평한 분배와 친환경 성장 등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으로 변화
- ◆ 중국경제가 적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인 노동공급상의 애로, 금융부문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적극적인 성장동력 확보 전략이 동시에 필요
 - 정년 연장, 호적제도 개혁 등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한 통제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신도시화 정책 및 중국판 마셜플랜의 성공적 추진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
- ◆ 뉴노멀 시대로의 안착 여부는 성장률 감속의 감내와 고용안정, 지방정부와의 상생과 협력, 국유기업의 효율성 제고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 한계의 극복 여부 등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
 - 한편 한국으로서도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에 따른 성장구조 전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Made for China'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

I
검토 배경

- 최근 중국경제는 생산, 소비 및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부동산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등 성장세가 약화되는 동시에 경제구조나 성장의 내용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면서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新常态)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

* 뉴노멀은 2003년 벤처투자가 R.McNamee가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 고위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의 경제적 기준으로 최초 제시한 이후 2008년 채권운용사 Pimco의 경영자 M.E.Erian이 사용하면서 널리 확대

* 전 조사국 국제경제부 신흥경제팀 과장

○ 2014년 GDP성장률(7.4%)이 1990년(3.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금년 성장률 목표치(3월중 전인대에서 발표 예정)도 전년에 비해 하향조정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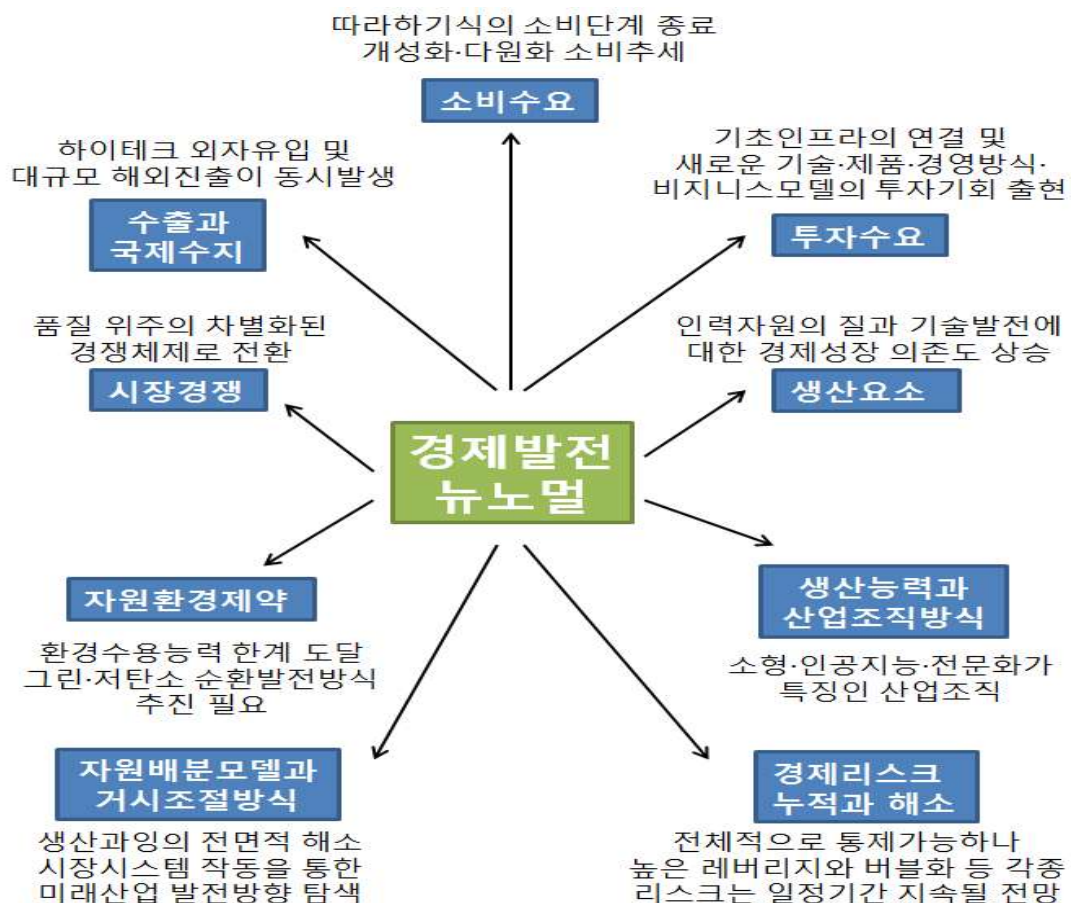
— 중국인민은행이 28개월만에 금리를 전격 인하(2014.11.22일)한 것은 추가적 경기하락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

□ 뉴노멀은 2014.5월 및 11월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강조한 이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9가지 특징을 제시하는 등 중국경제의 현재 상황 및 진로를 제시해주는 핵심 어젠다로 확립

○ 이는 중국경제가 뉴노멀이 의미하는 새로운 성장 및 발전의 단계로 전환되어가는 과도기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

→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변화방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평가

뉴노멀시대 중국경제의 9가지 특징



자료: 중앙경제공작회의(2014.12) 발표자료 중심으로 정리

II

뉴노멀 시대의 등장 배경과 변화방향

- ◇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중국경제는 성장세의 약화, 산업구조조정의 지속과 시장기능의 강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등 성장속도·성장동력·성장내용 등에서의 변화를 추구

1. 성장속도의 변화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연평균 9.7%의 고속성장을 지속

- 당과 국가가 주도하는 소위 “베이징 콘센서스(Beijing Consensus)”를 바탕으로 한 고속성장은 “중국식 자본주의(red capitalism)”로 불리며 성공적인 경제성과를 창출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연간 성장률 분포(1979~2014년)

	7% 이하	~8%	~9%	~10%	10% 이상
횟수(회)	3	7	3	7	16

- 그동안 중국정부가 고속성장을 강조한 것은 높은 경제성장률이 고용창출을 통해 체제 안정과 직결된다는 정치적 도그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

* 덩샤오핑은 경제성장률의 제고가 경제문제가 아닌 매우 중요한 정치문제로 지적(1990.3월)

- 중국정부가 바오빠*(保八)를 강조하며 2005~11년 연속 8%를 성장률 목표로 설정한 것이나, 지방정부 관료의 업적평가지 GDP성장률을 중시하면서 소위 官出數字, 數字出官 현상(official make statistics and statistics make officials)이 발생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

* 8%의 경제성장률 유지의 의미

- 그러나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한 2004년 이후 2014년은 최초로 성장률 목표(7.5%)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2012년 이후 바오빠 정책을 포기하는 등 중국정부의 성장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중고속성장(6~7%)으로 성장속도가 변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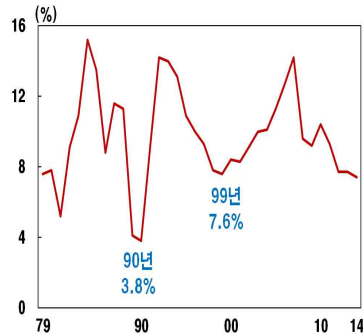
-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비중이 확대되는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종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을 추구할 유인이 희박

- 매년 800~1000만명의 신규노동공급 인력이 유입(대졸생 600~700만명과 농민공 200~300만명 등)되는데, 성장률 1% 제고시의 신규취업인력 수준이 2000년대 중반 80만~100만명 수준에서 2013년 170만명 수준으로까지 확대

- 또한 중국정부의 2020년 소강(小康)사회* 건설 목표를 감안시 연간 6.5~7% 전후의 성장률이면 충분하다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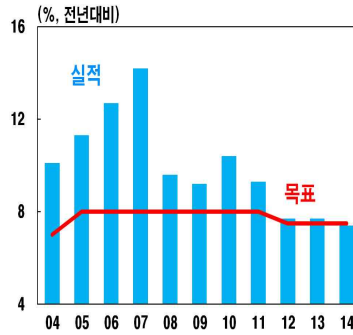
*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인 온포(溫飽)사회를 벗어나 생활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단계로 2020년까지 2010년 1인당 GDP의 2배 달성이 목표

개항개방 이후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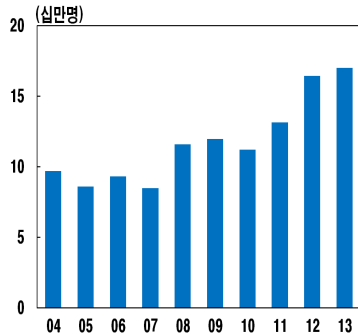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성장률 목표와 실적¹⁾



주: 1) 2014년은 3/4분기말 현재
자료: 국가통계국

성장률 1%당 신규취업인력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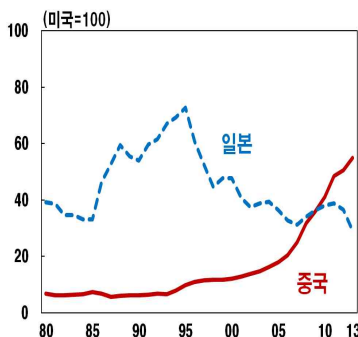
주: 1) 도시지역 신규취업자 기준
자료: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 여타 고성장 국가들의 사례와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률 유지가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

— 한국은 1963~91년 평균 8.5%, 일본은 1956~73년 평균 8.8%의 고도성장기 이후 10년간 각각 6%대 및 3%대로 성장률이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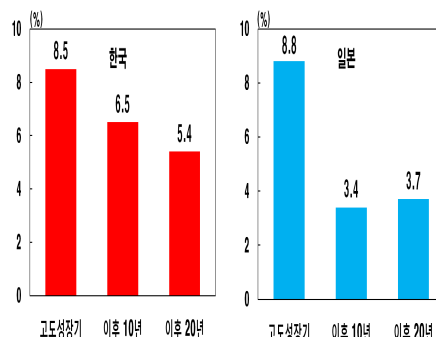
— 1980년 미국의 7% 수준에 불과하였던 중국의 명목GDP 규모는 2013년 55%까지 급증

미국 대비 중국과 일본 GDP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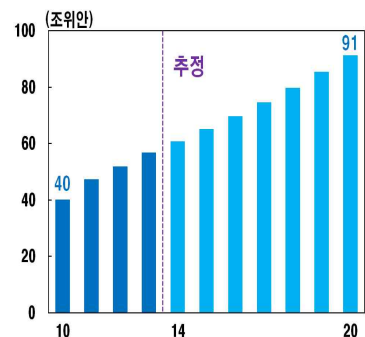
주: 1) 명목 GDP 기준
자료: World Bank

한국·일본 고도성장기¹⁾ 성장률



주: 1) 한국은 63~91년, 일본은 56~73년
자료: ECOS, 일본은행

명목 GDP 규모 추정¹⁾



주: 1) 연간 성장률 7% 가정
자료: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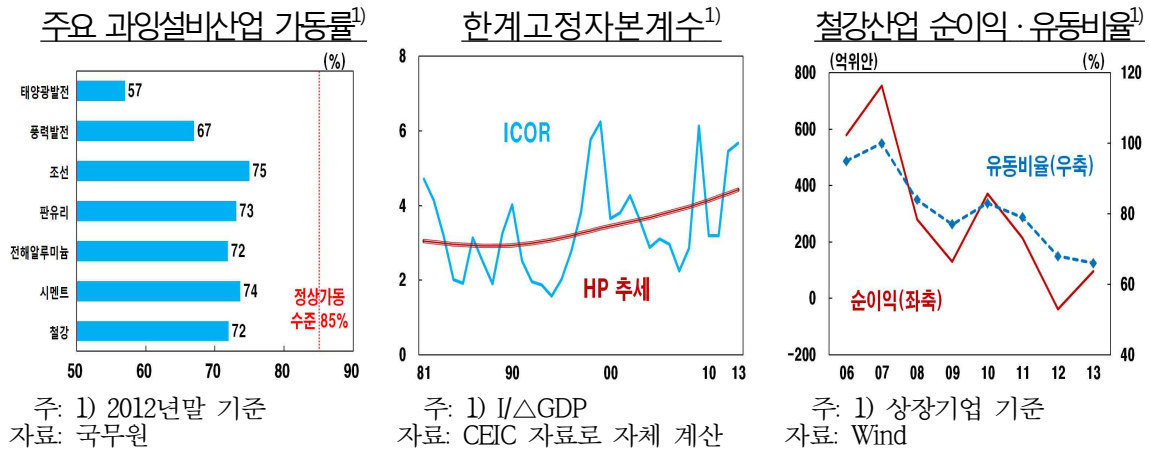
2. 성장동력의 변화

□ 중국경제는 요소투입 및 투자·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해왔으나 이와 같은 전략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성장구조 및 동력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

○ 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생산설비과잉과 자본집약적 산업의 기형적 발전, 경제효율성의 저하 등이 초래

— 철강, 시멘트, 조선 등 주요 산업의 가동률이 정상 수준(85%)을 크게 하회하는 55~75% 수준에 그치고 순이익 및 유동성 등 주요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자본효율성과 역관계에 있는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가 상승세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2014.11.28일)는 획일적 경기부양정책이 초래한 부동산투기와 설비투자 과잉, 감독소홀 등으로 2009~13년중 투자액의 절반(6.8조달러)이 낭비된 것으로 평가



- o World Economic Forum(2014.9월)은 중국경제는 생산요소 투입이 성장을 견인하는 단계를 지나 현재 효율성(eficiency)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단계에 있으나 아직 혁신(innovation)이 주도하는 경제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

성장단계별 주요 성장건인 요인과 1인당 소득분포(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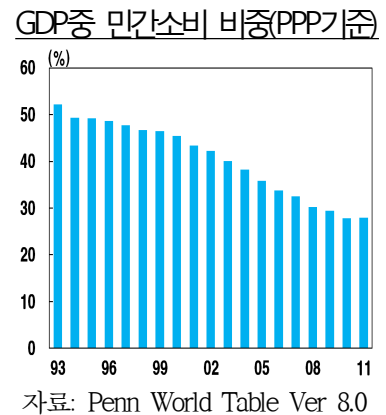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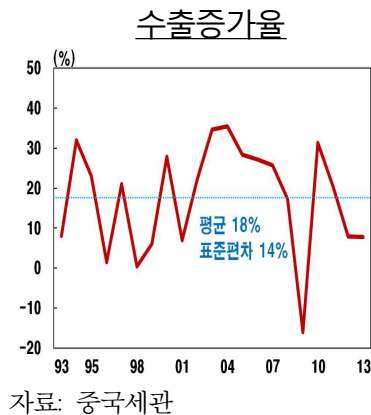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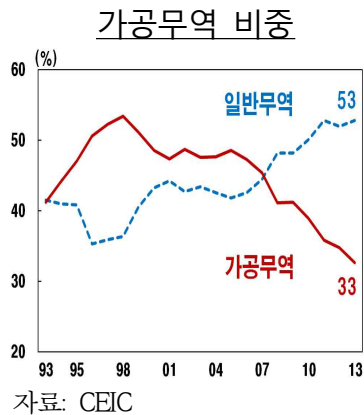
요인 1인당 GDP(달러)	I.생산요소 (factor)	I 과 II 중간	II.효율성 (efficiency)	II 와 III 중간	III.혁신 (innovation)
~ 1,000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 5,000	인도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이집트 인도네시아		
~10,000		이란	중국 남아공	멕시코	
~15,000		베네수엘라		러시아 브라질	
~20,000					
~25,000					한국
~30,000		사우디			
30,000~		쿠웨이트			미국 일본

자료: World Bank, WEF(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15)

- o 또한 수출이 대외환경의 급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임에 따라 단순가공무역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중심의 새로운 교역구조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

* 1993~2013년 평균 수출증가율은 18%이나 최대 35%, 최소 -16% 등으로 편차가 50%p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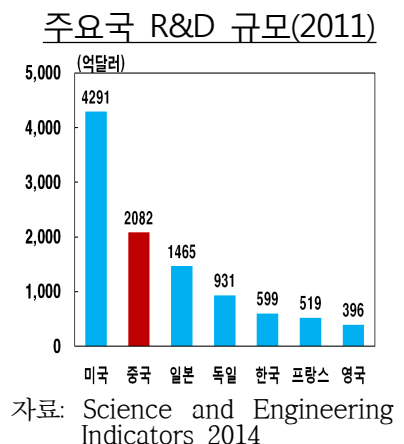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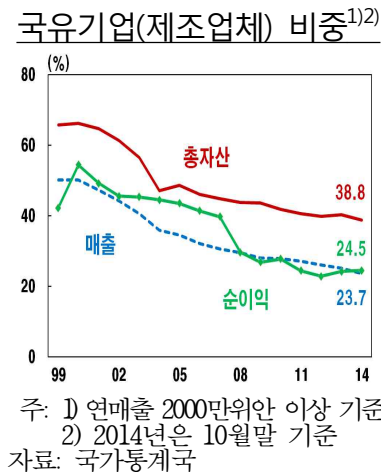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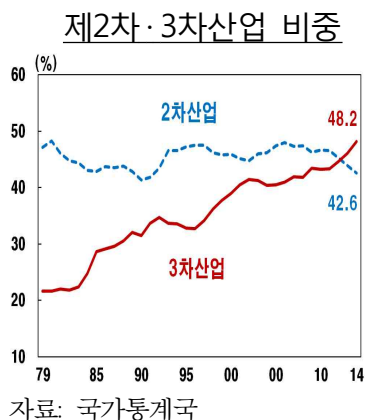
- 반면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불과(2011년 PPP기준)하여 안정적 성장동력으로서 민간소비의 역할을 제고해야 할 필요



□ 이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유기업 축소 및 민영기업 역할 증대 등이 진행중이며 수출입, 생산 및 소비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성장동력이 변화

- 제3차산업 비중이 2013년 처음으로 제2차산업을 추월하였으며, 그동안 중국경제의 절대적인 근간을 이루던 국유기업 비중이 감소하고 민영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R&D투자도 강화*

* 국무원은 신성장산업에 집중투자하기 위한 65억달러 벤처캐피털 펀드 설립 발표(2015.1.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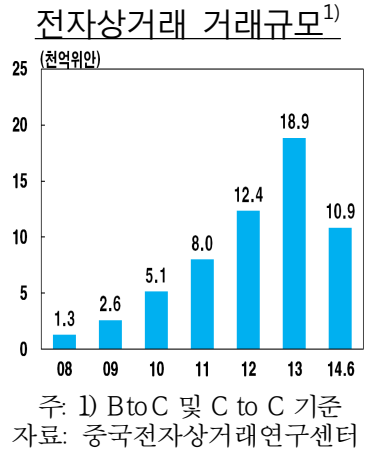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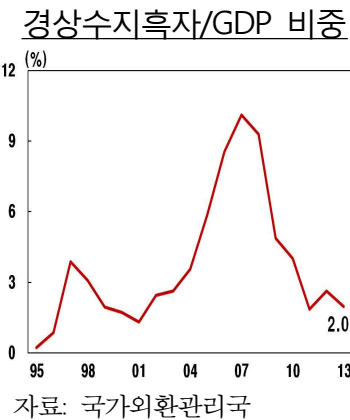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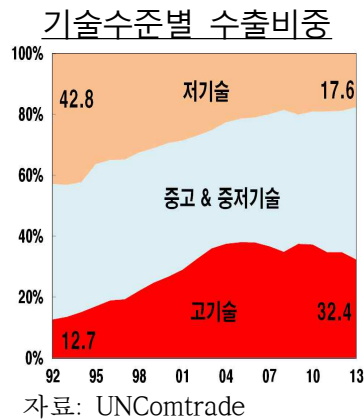


- 개혁개방 직후인 1992년 전체 수출의 13%에 불과하던 고기술제품 수출비중은 2013년 32%로 상승하였으며, 저기술제품 비중은 동 기간 43%에서 18%로 감소

* 고기술(high tech) 제품은 우주항공, 의약, 전자부품,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등을, 저기술(low tech) 제품은 음식료, 섬유·의류 및 가죽, 목재 및 종이, 가구 등을 포함(OECD 산업분류 기준)

— 또한 경상수지흑자의 대GDP비중은 2%대로 하락(2013년 기준)하는 등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축소

- 전자상거래(e-commerce) 규모가 5년만에 10배 이상 급증(2008년 0.13조위안 → 2013년 1.89조위안)하는 등 유통경로상의 격변도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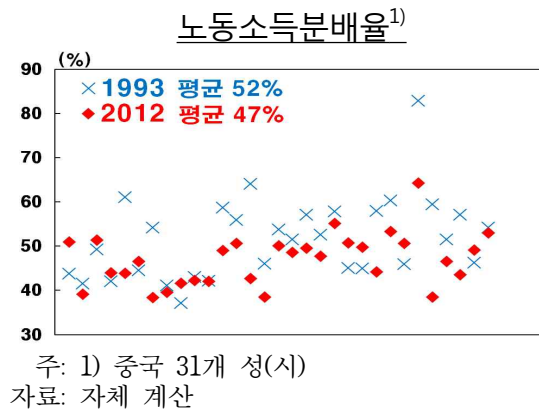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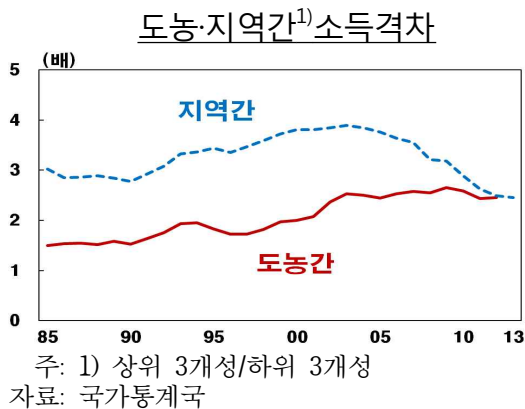
3. 성장내용의 변화

□ 그동안의 급속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 환경오염, 자원 사용량 급증 등의 문제점이 점차 심화

○ 소득계층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14년 0.47까지 상승*한 가운데 도농간 소득격차는 1980년대 중반의 1.5배에서 2.5배로 확대되었으며, 지역간 소득격차도 2.5배 수준에 달하는 상황

* 1978년 0.18 → 1981년 0.29 → 1988년 0.38 → 2000년 0.41 → 2014년 0.47

— 또한 31개 성(시)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이 1993년 52%에서 2012년 47%로 하락하는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분배몫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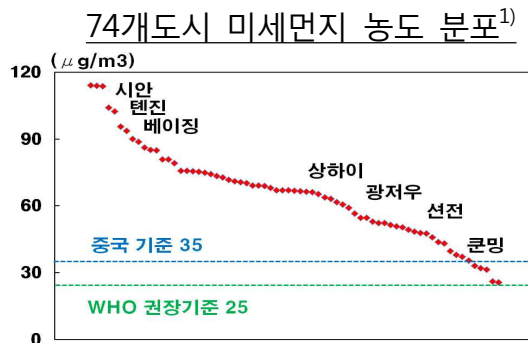
○ 한편 전국 74개 주요 도시중 국가 환경보호기준을 만족하는 도시가 5개에 불과하고 (2013년말 기준), 단위당 CO₂ 배출량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

시간당 전력 1킬로와트(kWh)를 생산하는 데 따른 CO₂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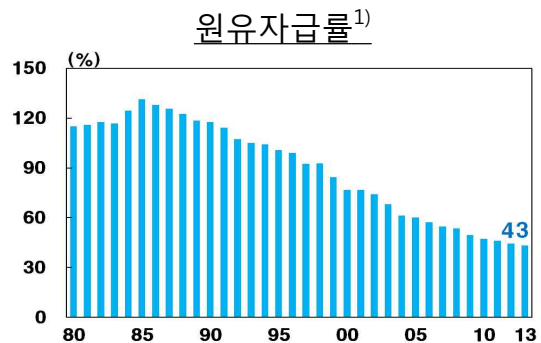
	프랑스	브라질	러시아	독일	일본	미국	중국	인도
CO ₂ 배출량	61	68	437	477	497	503	764	856

자료: IEA

-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100%를 상회하던 원유 자급률이 43%까지 하락(2013년 기준) 하는 등 자원 사용량 급증도 우려



주: $DP_{M_{2.5}}$ 2013년 평균 기준
자료: 환경보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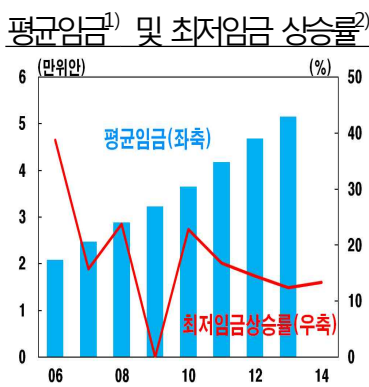
주: 1) 생산량/소비량
자료: 국가통계국

- 이에 따라 그동안의 성장방식이 초래한 대내외적 불균형과 제반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의 선부론(先富論)에 따른 일부 지역·계층 중심의 고속성장보다는 성장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제고되면서 성장내용의 변화를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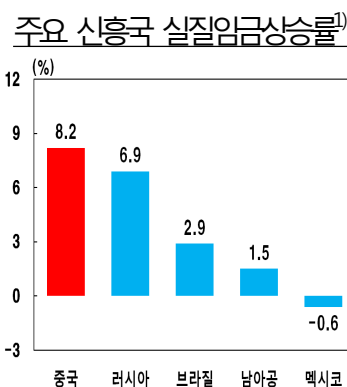
- 노동비용의 상승을 감수하면서도 근로자 임금상승 및 이를 통한 소득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기업에서 개인으로의 부의 이전을 추구

— 2002~13년중 중국의 실질임금 상승률(연평균 8.2%)은 여타 신흥국 상승률을 크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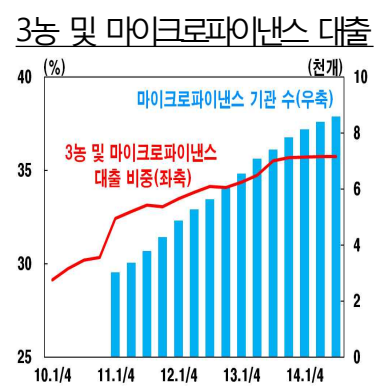
- 3농(농촌, 농업, 농민) 및 마이크로파이낸스 등 금융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은 증가하는 등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노력도 강화 추세



주: 1) 도시지역 국유기업
2) 31개성(시) 평균
자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 1) 2012~13년 평균
자료: ILO



자료: 인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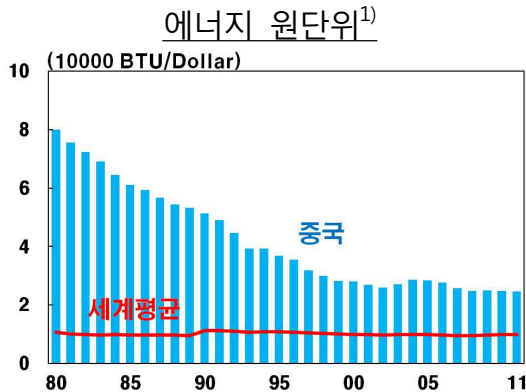
- 또한 환경오염 억제를 위한 제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친환경성장을 추구

—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질적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에너지 원단위*의 16% 감소를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을 전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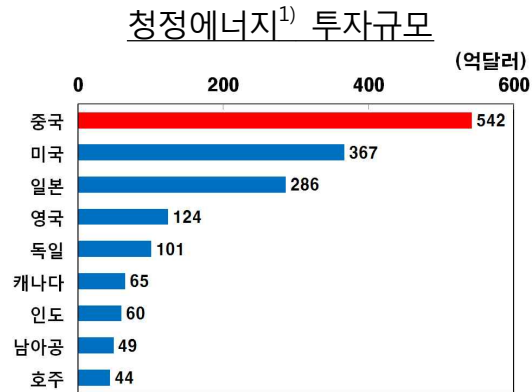
*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 energy basis unit)는 단위 GDP생산에 필요한 에너지투입량으로 에너지효율의 지표로 사용. 낮을수록 효율적임을 의미

- 청정에너지 분야에 세계 최대규모의 투자(2013년 542억달러)를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발전 시설 확장* 등 청정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가속

* 현재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용량은 19GW(giga watt)로 전세계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의 5%에 불과하나, 건설중인 설비 용량은 26GW로 전세계 건설중인 설비의 38%를 차지(IAEA)



주: 1) 2005 US달러 기준
자료: EIA



주: 1)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
자료: The Pew Charitable Trusts(2014)

-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 2014년말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전국 8개 대도시에서 자동차구매제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및 신성장동력 개발 차원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2014년중 급성장

* 2010.12월 베이징이 최초 실시하였으며 연간 신규자동차 등록대수를 제한하는 정책

** 신규구입 공무용차량의 30% 이상을 신에너지 자동차로 구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시 구입대금의 5~20% 내외의 보조금을 지급

최근 중국정부의 환경문제 대응책

	주요 내용
미국과 온실가스 감축 합의 (2011.12월)	•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수준에서 26~28% 감축, 중국은 203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동결
에너지발전전략계획 (2011.9월)	• 석탄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62% 이내로 감축(2013년 68%), 비화석 연료 비중은 15%로 확대(2013년 10%)
신환경보호법 실시 (2015.1월)	• 공해유발기업 벌금부담 가중, 공익소송 대상 및 정보공개 확대, 압류 등 정부관리수단 및 공무원 책임 강화 등

자료: 국무원

Ⅲ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국경제의 과제

- ◇ 중국경제가 적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인 노동 공급상의 애로, 금융부문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적극적인 성장동력 확보 전략이 동시에 필요

1. 노동공급상의 애로 극복

- 중국은 한국 및 일본과 함께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중 하나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력의 저하,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우려
- 부양률이 201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고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4%대로 상승한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1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
 - *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중국의 경우 2010년 75%에서 2055년 5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또 다른 인구대국인 인도는 67%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UN)
 - 이에 따라 그동안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를 향유하며 고성장을 유지해 온 중국경제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를 겪게 될 전망*
 - * 인구보너스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 증가로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인구오너스는 동 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것을 의미.
 -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경제가 이미 루이스 전환점*(LTP)을 통과하였거나(UBS 등) 아니면 조만간 통과하게 될 것(중국사회과학원 등)임을 시사
 - * Lewisian turning point. 임금상승 없이 농촌지역의 잉여노동력이 완전히 흡수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에 도달하게 되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제조업 발전이 한계에 이르면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성장도 둔화
 - 중국사회과학원(黃志綱 등, 2014)의 추정에 의하면 2013~18년중 노동참가율은 -0.65%p,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0.40%p, 2019~30년에는 각각 -0.70%p 및 -0.50%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성장률 결정요인 및 성장률 추정¹⁾

	(% , %p)			
	1985~2007	2008~2012	2013~2018	2019~2030
성장률(=A+B+C+D)	10.12	9.17	7.87	6.9
노동생산성(Y/L) 증감률(A)	8.62	8.80	8.66	8.0
노동참가율(L/Pw) 변화율(B)	-0.07	-0.55	-0.65	-0.70
생산가능인구 비중(Pw/Pt) 증감률(C)	0.54	0.43	-0.40	-0.50
총인구(Pt) 증감률(D)	1.03	0.49	0.26	0.1

주: 1) $Y = \frac{Y}{L} \times \frac{L}{Pw} \times \frac{Pw}{Pt} \times Pt$ 이므로 $\dot{Y}/Y = (\frac{\dot{Y}}{L})/(\frac{Y}{L}) + (\frac{\dot{L}}{Pw})/(\frac{L}{Pw}) + (\frac{\dot{Pw}}{Pt})/(\frac{Pw}{Pt}) + \dot{Pt}/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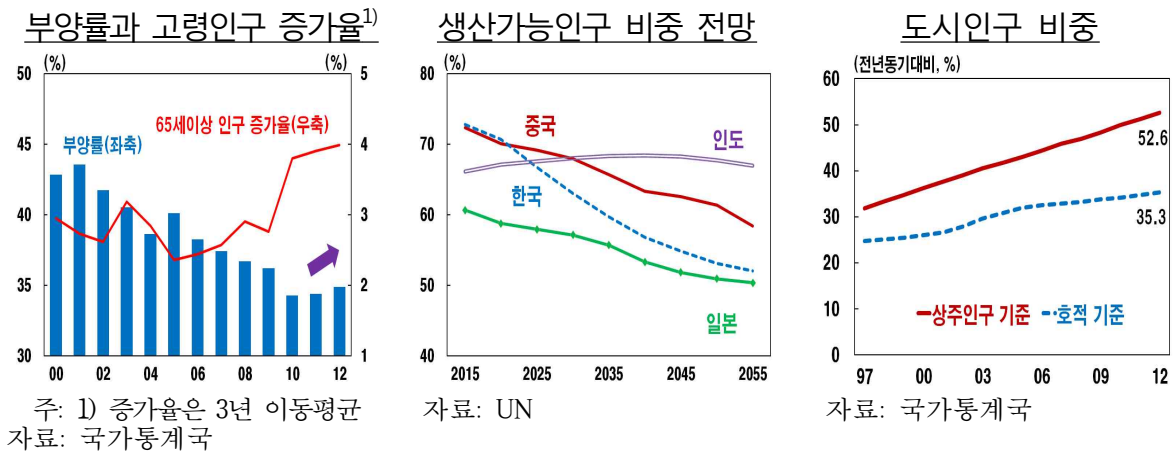
단, Y: 총산출, L: 노동력(=경제활동인구), Pw: 생산활동가능인구, Pt: 총인구

자료: 黃志綱 등(2014)

- 따라서 중국이 노동공급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호적제도 개혁을 통한 도시로의 인구유입 제한 완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현재 남성 60세, 여자 55세(육체노동자 50세)인 정년*을 향후 남성은 6년마다 여성은 3년마다 1세씩을 6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중국사회과학원, 2014.12월)이 제기

* 현재 58세가 되면 남성 근로자의 절반이, 52세가 되면 여성 근로자의 절반이 퇴직(Yang Yao, 2014)

- 한편 경직적인 호적제도로 농촌노동력의 도시지역 공급에 저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적절히 완화하여 노동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
- 도시인구 비중이 상주인구 기준으로 52.6%에 달하나 호적 기준으로는 35.3%에 불과 (2012년말 기준)



2. 금융부문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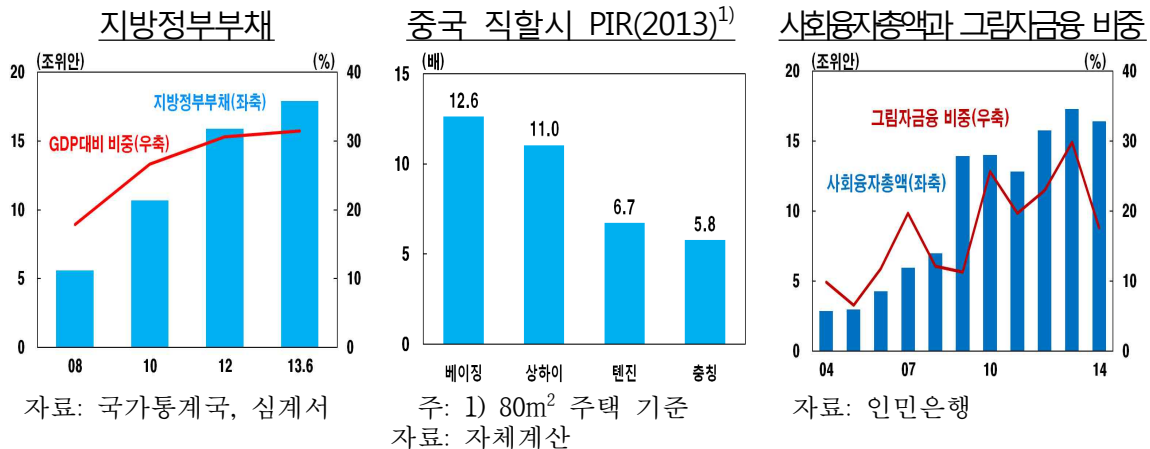
- 고성장 경제개발시대의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정책*이 초래한 금융시장의 제반 리스크 요인들이 뉴노멀시대에 현재화되면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사회과학원은 금융억압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 금융시장의 특징으로 인위적 저금리, 자금배분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소외, 민간부문에서 기업부문으로의 부의 이전 등을 예시(2015.1월)

- 지방정부부채 과다, 유동성 과잉 및 대체금융상품 부재로 촉발된 부동산가격 버블, 정규 금융권의 미비로 확대된 그림자금융 등이 대표적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
- 2013.6월말 현재 17.9조위안으로 GDP의 30%에 달하는 지방정부부채중 201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만 4.1조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주요도시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배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은 2013년 기준으로 베이징 12.6, 상하이 11.0 등으로 대도시의 경우 World Bank 등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간주하는 4~6 수준을 크게 초과
- 은행의 예대업무를 경유하지 않는 금융활동 혹은 상품을 의미하는 그림자금융 규모는 11~40조위안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 사회융자총액**중 그림자금융 비중은 2014년 17.7%로 2013년(29.9%)에 비해서는 축소

* 그림자금융 세부부문별 감독기관과 역할 분담 규정(2014.1월), 신탁상품 거래 규제(2014.4월), 은행간 대출거래 규제(2014.5월) 등

** 실물경제에 신규공급된 자금의 총량으로 위안화·외화대출, 주식·채권발행, 위탁대출, 신탁대출, 은행인수어음 등으로 구성되며, 후자의 3가지를 그림자금융으로 간주. 다만 이는 광의의 그림자금융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실제 규모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아직 은행의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고 중국 모기지론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방정부부채 누적과 그림자금융 부문의 디폴트 발생 증가 등으로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이 급증하면서 금융부문의 시스템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 14.3%(2005년) → 18.3%(2007년) → 18.3%(2009년) → 19.6%(2011년) → 20.3%(2013년) → 21.0%(2014.9월)

** 주택구입시 개인의 초기납입금 비율이 30~50%에 달하고, 나머지 잔액의 90%를 대출해 주는 관행 등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이 40% 하락하더라도 은행이 충분히 감내할만하다는 평가

□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하여 중국정부는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한 통제 노력을 경주

- 지방정부 관료에 대한 평가시 경제성장률 외에 민생개선 및 환경보호 등 질적 요소들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 투자 중심의 지방정부 성장 방식을 억제*

* 산시(山西)성(2014.7월 36개 현), 푸젠(福建)성(2014.8월 34개 현) 등은 일부 현의 평가항목에서 성장률 항목을 삭제

- 「예산법」 개정(2015.1월 시행)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대신 발행 목적과 규모를 크게 제한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부실자산 및 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10개 지역**에 자산관리회사를 설립(2014.11월)

* 그동안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한 데에는 지방정부가 원칙적으로 채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산하 지방공사를 통해 그림자금융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도 한 요인

**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푸젠, 랴오닝, 저장, 장쑤, 안휘, 광둥

— 공익성 자본지출에 한해 국무원의 허용한도 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동 법에서 규정한 방식 이외에 은행대출이나 신탁 등 여타 방식의 지방채권 발행은 금지하는 등 지방정부부채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

- 2주택 이상의 주택구매 제한 등 일부 대도시에 대한 부동산규제 등 버블제거를 위한 노력과 투기억제 조치를 실시

— 또한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를 2015.3월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2014.12.22일)으로 동 제도는 부동산투기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그동안 중국은 주택, 임야, 건설용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등기가 존재해 왔으며, 같은 부동산이라도 등기절차와 규칙 등이 다르고 부처 및 지방정부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투기에 취약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한편 금융시장의 리스크 축소 및 금융시장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최근에는 예금보험제도를 도입(2014.11.30일 시행조례 초안 발표)

— 동 제도는 2015년 상반기중 실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호 상한액을 50만위안*으로 설정하는 등 예금자 권익 보호를 강조

* 1인당 GDP대비 12배 수준으로 여타국의 2~5배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3. 신성장동력 확보

□ 신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책으로 국내적으로는 시진핑 정부의 중요 정책 어젠다중의 하나인 신도시화 정책(국가신도시화계획, 2014.3월)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공간적 확장과 함께 소비시장 주체로서의 시민 확대를 유도하여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도모

○ 2020년까지 도시화율 목표를 상주인구 기준 60%, 호적인구 기준 45%까지 높이는 등 도시인구를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동 과정에서 철강, 시멘트 등 과잉설비산업의 재구조정과 함께 IT, 환경산업 등에 대한 신수요 창출로 산업 부문을 업그레이드

○ 기존의 장강(長江)삼각주 및 주강(珠江)삼각주* 등의 도시군은 과학기술, 친환경 등의 신산업에 주력하고 낙후된 중서부지역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새로운 도시군을 건설하는 등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

* 장강 삼각주는 상하이, 장쑤성 남부 및 저장성 북부를, 주강 삼각주는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를 포괄

□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및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의 교통·통상 네트워크인 내륙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를 아울러 지칭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을 추진(2013.9월)

* 동 전략은 중국판 마샬플랜으로도 불리우며 동 전략이 포괄하는 지역은 전세계 인구의 63%, 경제규모의 29%, 수출의 24%를 차지

○ 아시아 역내 경제개발 주도권 확보,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해외 에너지 및 자원개발, 상품과 인력 수출 확대, 미국이 장악한 해상운송루트 견제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추진

○ 중국 저장성과 스페인 마드리드를 연결하는 직통 화물열차노선이 계획 수립 5년여만에 개통*(2014.11월)된 가운데 향후 고속철도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그 과정에서 자재공급 및 공사를 중국기업이 담당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

* 동 노선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 및 프랑스를 경유하는 총 연장 13,052km의 세계 최장의 노선임

** 향후 일대일로 전략 관련 투자액이 1.6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中金公司, 2015.1.7일)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 관련 20개국과의 MOU 체결 및 초기운영자금(500억달러) 지원(2014.10월), 자원개발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한 내륙 실크로드 기금(400억달러) 출연 약속(2014.11월) 등도 동 전략의 구체적 실행계획의 사례
- 한편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에 대응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창설 추진도 일대일로 전략과 함께 대외영향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

신형도시화 주요 목표

지표	2012년	2020년
도시화(상주인구 기준)	52.6	60
도시화(호적인구 기준)	35.3	45
서민용공공주택 보급률	12.5	23
수돗물 공급비율	81.7	90
도시가게 인터넷 속도(Mbps)	4	50
신규건축 중 친환경건물 비중	2	50

자료: 국무원(2014.3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



자료: 언론자료 종합

IV

종합평가

- 중국정부가 뉴노멀 시대로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장률 감속의 감내, 지방정부와의 갈등,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의 한계 등 유의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은 상황
 - 고용안정을 위한 적정성장 수준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는 해도 일정수준 이상의 성장이 여전히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장률 감속을 얼마나 감내해 낼 수 있는지가 관건
 - 중국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 배제 및 구조개혁 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대규모 투자승인조치*는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조치로서 여전히 투자가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줌

* 2014.10월~12월중 베이징 신공항(800억위안) 등 총 1.2조위안 규모의 신규 인프라투자를 비준
 - 대규모 과잉설비 및 공해유발 기업의 퇴출도 세수 감소 및 실업을 우려한 지방정부의 저항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
 - 중국정부는 2014~18년중 8,000만톤의 철강산업 과잉설비를 감축할 계획인데, 그 중 6000만톤의 설비가 밀집되어 있는 허베이(河北)성의 경우 동 조치로 20만명의 근로자가 직접영향을, 40만명이 간접영향을 받게 될 전망(中國勞動保障報, 2014.7월)

— 이와 같은 배경하에 지난 1년여간 장쑤(江苏)성 등 일부를 제외하면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经济参考报, 2014.9월)

○ 한편 서비스업의 비중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부 부문별로 아직 발전 여지가 많은 점이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 등도 고려할 부분

— 서비스업중 금융·보험 등 생산성이 높은 고임금 부문의 비중이 아직 크지 않고 도소매·숙박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과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큰 수준

— 민영기업의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과제인 가운데 특히 에너지, 통신, 항공, 은행 등의 산업은 자연독점 혹은 국가정책적 목적 등으로 시장지배적 국유대형기업이 온존*하고 있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가능성

* 은행업의 경우 2014.3/4분기말 현재 16개 상장은행중 5대 국유상업은행(공상, 건설, 농업, 중국, 교통 은행)이 전체 매출의 72%, 순이익의 74%, 총자산의 72%를 차지하는 상황

□ 금년은 뉴노멀 시대로의 시스템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로 향후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여타국에 비해서 고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은 기관별로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2016~20년 6.5~7.0%, 2020~30년 5.0~5.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중국 잠재성장률 추정

(%)

추정기관	발표시기	추정기간	
		2016~20년	2020~30년
중국사회과학원(李扬)	2014.10월	5.7~6.6	5.4~6.3
중국사회과학원(蔡昉)	2014.11월	6.2	
중국사회과학원(黃志鋼 등)	2014. 4월	6.5	5.1
J.P.Morgan	2014. 8월	6.5	
Goldman Sachs	2014.12월	6.5 ¹⁾	
World Bank	2012. 2월	7.0	5.0 ²⁾
국무원 발전연구센터(李善同)	2014. 3월	7.0	6.2

주: 1) 2015~19년 2) 2021~25년은 5.9%이며 2026~30년은 5.0%

○ 다만 성장률 감속에도 불구하고 교육 확대*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 및 생산성 증가가 노동력의 감소를 보완하면서 성장세 급락을 막을 전망(Yang Yao, 2014)인 가운데 여타국보다는 상대적인 고성장을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18~22세 인구의 27% 수준인 대학재학 비율이 2020년 40%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며, 1999~2008년중 경제성장률의 기여율 분해결과 9.6%가 재학연한으로 측정된 인적자본 축적의 결과로 분석(J.Whalley 등, 2010년)

○ 향후 중국정부는 성장목표의 적절한 하향 조정에 따라 구조조정과 개혁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고 총수요관리 중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가능성은 희박

□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등 뉴노멀 시대 진입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긴급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수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에 따라 중국의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전략 전환은 한국의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중 상당부분이 중국의 가공수출용 반제품 및 부품(2013년 72.7%)으로 자본재 및 소비재 등 최종재 비중이 작은 것에 주로 연유*

* 2013년 BEC 기준 소재원료 0.5%, 반제품 33.7%, 부품 39.0%, 자본재 24.4%, 소비재 2.4%(UN Comtrade)

○ 따라서 향후 한국은 차별화된 제품과 특화된 서비스 등으로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하면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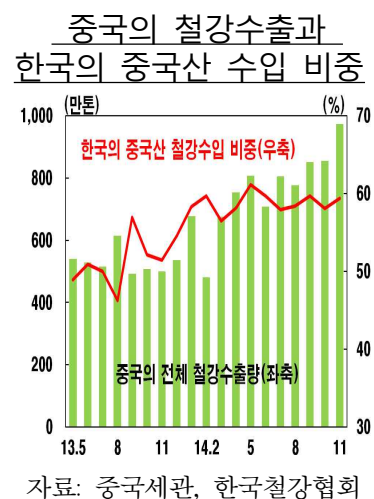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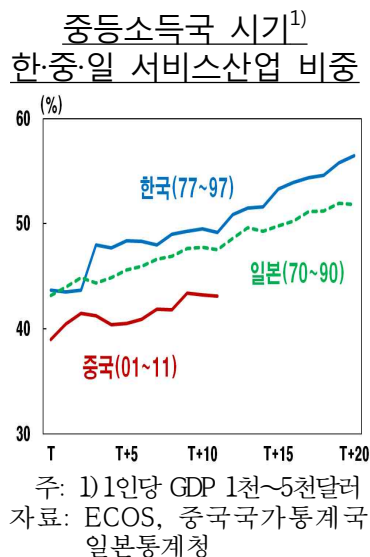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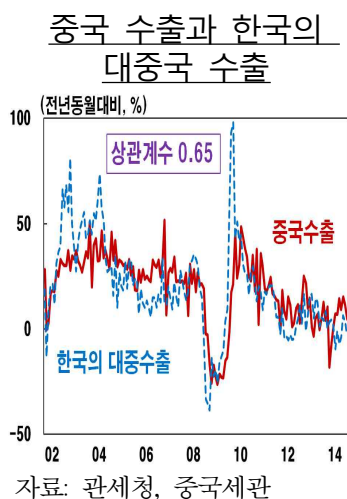
— 2020년 중국의 중산층이 6억명을 상회하는 구매력 집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Xinhua, 2014.12월)되는 등, 소위 "Made in China"의 시대에서 "Made for China"의 시대로 변화하는 추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

— 또한 과거 한국, 일본 등의 소득수준과 비교해 볼 때 향후 의료·관광·교육 등의 서비스 수요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한편 중국의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 확대가 한국의 관련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

— 중국의 철강수출과 한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이 2014년중 급증*한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산 H철강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조치(2014.12.23일)를 내린 바 있음

* 중국의 월간 철강수출량은 2013.5월 541만톤에서 2014.11월 972만톤으로 급증하였으며, 한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비중은 동 기간 중 48.9%에서 59.4%로 증가



< 참고자료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뉴노멀” 시대의 중장기 경제성장과 구조조정, 한중경제포럼, 2014.11.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 신실크로드 정책의 명과 암,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뉴스레터 제419호, 2014.11.28.
- 经济参考报, 化解产能过剩遭地方政府 “怠工”, 2014.9.23.
金融时报, 报告: 过去5年中国浪费6.8万亿美元投资, 2014.11.28.
上海證券報, 不同机构眼中的中国潜在增长率, 2014.3.26.
李扬, 新常态下经济面临六大挑战, 中國證券報, 2014.12.8.
張明, 中國經濟新常态:內涵與展望, 中國社會科學院 Policy Brief No.201501, 2015.1.14.
財新网, 蔡昉: 中国潜在增长率将降至6.2%, 2014.11.20.
朱海斌, 中国潜在增长率趋势分析, 中國金融, 2014.8.18.
中國勞動保障報, 牢牢抓住牛鼻子化解产能过剩要守住保就业底线, 2014.7.8.
中国社科院, 报告建议从2018年开始延迟退休年龄 取消男女差别, 2014.12.26.
中國證券報, 我国 2016至2020年GDP潜在增长率至少为 5.7%, 2014.10.18.
黃志鋼, 劉霞輝, 中國經濟中長期增長的趨勢與前景, 經濟學動態, 2014年第8期, 2014.4.
- Damien Ma, Rebalancing China's Energy Strategy, Paulson Papers On Energy and Environment, The Paulson Institute, 2015.1.
D.Rodrik, Are Services the New Manufactures?, Project Syndicate, 2014.10.13.
John Whalley, Xiliang Zhao, The Contribution of Human Capital to China's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1695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0.12.
ILO, Global Wage Report 2014/15, 2014.
The Economist, Promethean perils, 2014.12.6.
The Pew Charitable Trusts, 2013 Who's Winning the clean Energy Race?, 2014.4.3.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15, 2014.9.3.
Xinhua, Time to seize China's 'new normal' opportunities, 2014.12.15.
Yang Yao, A New Normal, but with Robust Growth: China's Growth Prospects in the Next 10 Years, Think Tank 20, Brookings, 2014.